

광주 상습 침수취약지구 관리 '주먹구구식'

취약지구 37곳...시·구청 선정 기준 제각각에 근본 해결책 마련 안해 대부분 저지대인데 배수펌프·저수조 등 설치 제대로 안돼 침수 반복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도로 침하 등 잇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침수취약지구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취약지구 선정 기준도 없어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되더라도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침수취약지구는 총 37곳(동구 6곳, 서구 4곳, 남구 7곳, 북구 8곳, 광산구 12곳)에 달한다.

침수취약지구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 피해가 예견되는 곳으로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곳을 취약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이 탓에 광주시가 선정한 침수취약지구와 자치구가 선정한 침수취약지구도 각각 달랐다.

선정도 안전진단이나 구체적인 침수 원인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 단순히 과거 피해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하고 있어 정확한 침수취약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니 대책을 마련해도 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남구 백운광장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 서 주택과 상가 120여 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남구는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하수관 직경이 더 큰 관로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시간당 51mm 비가 집중되자 여전히 백운광장은 물이 차 올랐다.

남구는 이번 백운광장 일대 침수 원인에 대해 '비와 함께 밀려온 쓰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수구 입구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쓰레기들이 걸려 빗물이 도로로 차 올랐다는 것이다.

침수취약지구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도 쓰레기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현장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침수취약지구로 선정됐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침수취약지구는 대부분 도심 저지대라는 점에서 배수펌프나 탱크 등 저수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구에 설치된 저류지는 봉선동과 월산동, 백운동 일대의 침수취약지역이 아닌 행암동(1곳)과 노대동(2곳), 임암동(3곳)에 있다.

서구가 선정한 침수취약지구 중 농성동 일대(서석고 인근)는 2018년과 2020년 비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곳은 인근 하수도 용량도 적고 하류 지역인 탓에 남구 백운동의 물까지 물리개 돼 상습 침수 구역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농성·화정동 주민들은 서구청에 항구적 침수대책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 행진을 벌였고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침수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333일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서구는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이 일대에 하수도를 추가 설치했지만 올해 집중호우에도 빗물 역류로 인한 도로 침수는 피하지 못했다.

서구 관계자는 "시우량(1시간동안 내린 강우량)이 20mm 가량이면 감당이 가능한데, 한 시간에 45mm까지 내릴 거라 예상치 못해 도로가 잠긴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지대로 선정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침수취약지구에 저류지를 마련하고 반드시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실 제방 보강 공사 광주시 광산구 삼계동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19일 폭우로 인해 유실됐던 제방과 다리에 흙주머니를 쌓으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명기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 교수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시간당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모래 마개나 빗물 받이는 소극적 대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0월 10일 단 하루 광주지역 일간지 한곳에만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도 입찰 공고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13일로 촉박하게 정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입찰 참여 조건에 면허 부분을 강화하고 공사 실적도 많은 업체로 설정해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조건을 효창건설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A씨는 다른 '들러리 업체'를 동원했다. A씨는 C씨 등으로부터 입찰 관련 각종 서류를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 C씨 업체 명의로 효창건설의 입찰가 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 낙찰됐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정에서

도피 28년만에 법정에 선 '조폭 보복살인'

중국 밀항 후 국내 들어와 숨어지내다 지난 7일 체포

광주지법서 첫 공판기일 열려 밀항 기간 공소시효 공방 예고

대만 서울 도심 호텔 앞에서 살인사건을 벌인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도피 28년만에 검거돼 법정에 섰다.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선 제12형사부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나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영산파'의 행동대원으로 지난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시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자신의 조직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명 '뉴월드호텔 앞 조폭 살인사건'으로, 영산파는 1991년 1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목포파' 조직원들이 자신의 두목을 살해하자 이날 보복에서 나섰다. A씨 등은 뉴월드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목포파 조직원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잠복해 있다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검·경이 조직폭력배 일망타진에 나서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세력이 위축됐다.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거를 피한 A씨는 지난 2005-2006년 사이 군산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국내로 들어와 숨어 지내다 28년 6개월 만(범행 시점 기준)인 지난 7월 식당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선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를 이번 재판에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밀항 기간에 따라 A씨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다툴지 때문이다. 밀항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만큼 A씨와 검찰은 A씨의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의 형벌권을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로 살인죄 경우 25년이던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다.

결국 A씨의 공소시효 완료 시점을 2015년 이전으로 본다면 살인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은 다음달대로 A씨에 대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입찰 담합도 드러났다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가 미리 짜...광주지법, 3명 징역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붕괴 참사 원인으로 지목받은 불법하도급 뿐 아니라 입찰담합도 드러났다.

특히 지연·학연·인맥을 이용한 브로커가 활개치고 건설업체, 재개발조합의 부도덕함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 A(42)씨, 전 재개발 조합장 B(81)씨, 건설업체 대표이사 C(4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공정별 낙찰 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짜고 학동 재개발 정비

사업 4구역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월께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효창건설의 운영자인 A씨는 재개발 이권에 개입해온 브로커를 통해 당시 조합장인 B씨를 만나 청탁했다.

브로커는 A씨에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에이치에스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B씨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경쟁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2017년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